

'조두순법' 시행됐지만..."인력·예산 없어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2019-04-21 11:41



'조두순법' 시행됐지만..."인력·예산 없어 실효성 의문"

[앵커]

미성년 성범죄자를 일대일 밀착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란데 업무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16일부터 시행된 조두순법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의 일대일, 24시간 관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가 '재범 고위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 전자발찌

착용자 3,000여명 중 5명만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보호관찰관 인력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단 점입니다.

<이수정 / 한국보호관찰학회 홍보이사·경기대 교수> "지금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2만명인데 보호관찰관이 1,400명뿐이 없고요. 전자발찌 찬 사람들이 한 3,000명쯤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지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전자발찌 착용자 2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선진국은 10명이 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대일 전담인력을 지정하면 남은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 전반적인 관리소홀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내년 출소하는 조두순을 관리할 경기도 안산 보호관찰소의 경우, 전담인력을 1명만 빼도 1인당 관리 대상자는 15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자는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데,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은 여전히 한 해 평균 5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총원과 예산 증액 없이 시행된 조두순법이 효과는커녕 역효과를 낼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